권역응급센터 병상포화지수 68%

작년 401개 응급의료기관 대상 평가 결과

전국 응급의료기관 91% 지정기준 충족해

필수영역 미충족 36개 기관에 과태료 부과

지난해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전문인력 확보 수준은 여전히 제자리였으며 응급실은 이전보다 더 많은 환자들로 붐빈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시설과 장비, 인력 등 기준을 충족한 응급의료기관은 10곳 중 9곳에 달하고 전문의가 직접 진료한 비율 등은 개선됐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은 2017년 10월1일부터 지난해 9월30일까지 응급실 의료서비스 수준을 평가한 '2018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지난달 31일 발표했다.

복지부 장관이 매년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위탁해 실시하는 응급의료기관 평가는 지난해 권역응급의료센터 36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 116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 249개소 등 총 401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평가 항목은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평가하는 필수영역을 비롯해 안전성, 효과성, 환자중심성, 적시성, 기능성, 공공성 등 7개 평가영역이다. 응급의료기관 종별로 상위 30%는 A등급, 필수영역이 미충족이거나 5등급 지표가 2개 이상인 기관은 C등급, 나머지 기관은 B등급을 받는다.

우선 시설·장비·인력기준을 충족한 응급의료기관은 91.0%로 2017년 85.1% 대비 5.9%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상대적으로 지정기준 충족에 어려움을 겪는 응급의료 취약지 소재 응급의료기관도 지정기준 충족률이 82.5%에서 85.5%로 향상됐다.

응급실 내원 환자 수를 감안한 전담 전문의나 전담의사 1인당 하루평균 환자 수는 권역응급의료센터(전담 전문의 1인당 15.4→14.1명)와 지역응급의료센터(전담 의사 1인당 12.8→12.3명)는 개선된 반면, 지역응급의료기관은 11.4명으로 전년과 동일했다. 응급실 전담 간호사 1인당 일평균 환자 수는 전년과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응급실의 혼잡한 정도를 나타내는 병상포화지수는 권역응급의료센터가 66.7%에서 68.0%, 지역응급의료센터가 42.7%에서 44.1%로 모두 증가했다.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중증상병환자 재실시간(응급실퇴실시각?응급실내원시각)은 7.0시간에서 6.8시간으로, 체류환자지수(응급실에서 12시간, 24시간, 48시간 초과 체류한 환자 비율)는 7.8%에서 7.3%로 개선됐다.

중증응급환자를 적정시간 안에 전문의가 직접 진료한 비율과 해당 기관에서 최종치료가 제공된 비율은 모두 향상됐으며 전원된 중증응급환자 중 최종치료 제공 없이 다른 기관으로 재전원한 비율은 전년과 비슷했다.

지난해 평가 결과 지정기준(필수영역) 미충족으로 C등급을 받은 36개 응급의료기관에 대해선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완료했다. 평가 결과는 올해 1월1일부터 응급의료수가 차등 적용으로 반영 중이다.

기관별 등급 등은 중앙응급의료센터 누리집(https://www.e-gen.or.kr/nemc)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태호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통해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응급의료기관이 줄어들고 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 지표가 개선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사회안전망인 응급의료서비스의 적정 공급과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양질의 응급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더위야 비켜라~ 마지막 장맛비가 오락가락하는 지난달 31일 한국해비타트는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에서 '2019 한국번개건축(KBB)'을 시작했다. 오후 일과가 시작되기 전 '아이스헬멧 챌린지'에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도전해 더위를 날려보내고 있다.

경찰, '마약과의 2차 전쟁' 나선다…클럽 등 집중단속

올해 하반기 클럽과 온라인 등을 통해 암암리에 이뤄지는 마약류 유통과 투약 행위 등에 대한 대대적 단속이 진행된다.

경찰은 상반기 '마약과의 전쟁' 이후 재차 클럽, 온라인 등에서의 마약 유통과 파생 범죄를 추적하는 등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달 31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오는 8월1일~10월31일 전국 단위 마약류 유통 및 투약사범 집중단속을 전개한다.

대상은 클럽 등 다중출입 장소에서의 마약류 투약과 유통, 인터넷 이용 마약류 거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여행객·외국인 마약류 밀반입 등이다.

경찰은 또 마약류 등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와 불법촬영·유포 등 파생 범죄 등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앞서 경찰은 버닝썬 등 강남 클럽 관련 마약·성범죄 의혹이 불거진 이후 전국적인 단속을 벌여 5996명을 붙잡았다.

이후 경찰은 후속 조치를 진행하면서 마약류 범죄에 관한 우려 지점이 여전히 남았다고 판단, 추가 단속에 나서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불법행위 등으로 폐업한 클럽과 관계자들이 장소와 상호를 바꿔 비슷한 형태로 영업하는 행위, 다크넷·가상통화와 연계한 마약류 유통 행위 등을 적극적으로 파악해 관련자들을 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마약류 사건 관련 112 신고 접수 초기부터 유관 기능을 유기적으로 동원해 대응하고 성범죄 등 파생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예방 활동도 벌이겠다는 계획이다.

또 서울 강남권 클럽 등의 경우 서울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클럽 불법행위 합동 대응팀' 주도로 관련 기능과 관계기관 공동으로 단속과 점검을 전개하겠다는 방침이다.

'성희롱 피해' 목포시의원, 가해 의원 고소

목포시의원의 지속적인 동료 여성 의원에 대한 '성희롱 파문'이 피해 의원의 검찰 고소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목포시의회 A의원은 지난달 31일 오후 '성희롱' 가해자인 B의원을 성폭력 등의 혐의로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여성의원인 A의원은 지난해 의회 개원 이후 지속적으로 B의원으로부터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발언 등으로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A의원은 "이번 성희롱 건을 개인의 일탈로 보는 시각이 많다"면서 "불평등한 권력구조에서 오는 인격대 인격의 문제로 부당함을 겪는 것이기 때문에 이의제기를 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수사대상 외국인 출국정지' 최장 3개월

앞으로 외국인이 범죄를 저질러 수사를 받게 되면 우리 국민처럼 최장 3개월까지 출국정지될 수 있다.

지난달 31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다음달 1일 입법예고될 예정이다.

그동안 국내에서 수사를 받는 외국인의 출국정지기간은 10일이었다. 수사 선상에 오른 외국인이 달아났을 경우에는 사법당국이 1개월의 출국정지를 요청할 수 있었다.

반면 우리 국민의 출국금지기간은 1개월이며, 도주 시에는 3개월까지 출국금지된다.

하지만 최근 국내에 머무는 외국인이 급증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출국정지 요청 역시 늘어나 출국정지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의 외국인에 대한 출국정지 요청은 지난 2014년 1486건이었던 것에 비해 지난해 2552건까지 증가했다. 범죄 수사로 인한 출국정지 역시 지난 2014년 1095건에서 지난해에는 2008건까지 늘었다.

이에 법무부는 수사를 받게 된 외국인의 출국정지기간을 10일에서 1개월로, 도주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3개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뉴시스

이런판결 저런판결

성매매 유인후 때리고 "돈 내놔" 무서운 10대, 1심 실형

모텔 부른 후 뒤에서 덮쳐 폭행·흉기상해

성매매를 하는 척 성인 남성을 모텔로 유인한 뒤 폭행을 동반한 협박으로 돈을 뜯어낸 10대 일당이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법정 미성년자 1명은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지난 26일 강도상해·특수강도·특수절도·공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군(19) 등 7명에게 최대 장기 4년~단기 3년6개월의 징역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소년법은 2년 이상 유기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장기와 단기로 형기의 상한과 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각각 A군과 B군(18)에게 장기 4년~단기 3년6개월의 징역을, C군(18)과 D군(18)에게 각각 장기 3년6개월~단기 3년, 장기 3년~단기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E군(19)과 F군(18)에게는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법정 미성년자인 G양(17)은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됐다.

이들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 5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빌미로 성인 남성들을 유인한 뒤 협박해 5명으로부터 적게는 45만원 많게는 764만원까지 총 2138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에 따르면 이들은 각자 역할을 나눠 G양이 채팅앱을 통해 성매매를 제안해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하면, 미리 잠복하고 있던 일행이 뒤에서 덮쳐 폭행한 뒤 금품을 갈취해 도망가는 수법을 썼다.

이들은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려했으니 돈을 달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했으며 흉기로 상처를 입히거나 폭행으로 늑골을 골절시키는 등 2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A군과 B군은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아우디 차량을 운전해 강도 범행에 이용하고 교통사고를 낸 뒤 도망치는가 하면, 인형뽑기 방에 있는 지폐교환기를 노루발못뽑기(빠루)로 부순 뒤 현금을 절도하는 등 추가적인 범행도 드러났다.

손 판사는 "이들이 이미 여러 차례의 비행으로 거듭 소년보호처분 또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수법이 매우 계획적·조직적이고 위험성이 큰 데다 강도로 인한 피해 금액이 상당해 피해자들이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